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총 75명으로 지난 2017년 117명에 비해 36%(42명)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경우 지난 2017년 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수나 보행 중 사망자수 등 모든 교통

총 75명…2017년 117명 比 36% ↓

11개 교통안전기관 협업 효과 특특

사고 지표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지난해 2월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11개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교통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협업팀은 교통사고 관련 정보 공유와 사고 원인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통

합 등을 추진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정부혁신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협업팀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 17곳 횡단방지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올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도심부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통 사고지수가 대폭 개선됐다"며 "올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108곳 집계…승인 6건

지난해 마지막 날이던 12월 31일 까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108곳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12월 24일 집계 당시 106곳보다 2곳이 더 늘어났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 108곳 중 폐원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6곳이며,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8곳이었다.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사립유치원은 94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승인받은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지만 추진중인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34곳이었다.

전북은 폐원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7곳은 학부모 동의를 얻는 단계다. 경기도는 14곳이 추진 중인 가운데 1곳은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역시는 ▲대구 10곳(교육청 신청 1곳) ▲인천 8곳 ▲광주 5곳 ▲부산 3곳 ▲울산 2곳 ▲대전 1곳 순으로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밖의 지역은 ▲경원 6곳(교육청 신청 2곳) ▲충남 5곳(폐원 승인 1곳, 교육청 신청 2곳) ▲충북 3곳(교육청 신청 1곳) ▲전남 3곳(교육청 승인 1곳) ▲경북 2곳 순으로 폐원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과 제주, 세종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은 모두 인근 유치원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개통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 지원 센터'(www.moe.go.kr)는 불법·편법적인 폐원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미흡한 대응은 교육부가 직접 상황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화천산천어축제 얼음천공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2일 오후 축제 관계자들이 얼음낚시 천공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소방청,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발표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청은 2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쇄·집금

류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 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뉴시스

영유아·장애인·다문화·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국내외 유치원·교육기관 지원 확대

교내·교외 학부모·교직원 지원 확대

교내·